"소비자 주권 전북도정 추진하겠다"

민주 이원택 의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전북에 특화된 보호정책 마련 시급"

소비자 권리 정책 정비 ·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 발생 시 도 차원 법률 지원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9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소비자 주권 전북도정으로 도민의 안전이 흔들리지 않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북에 특화된 보호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쿠팡 청문 계획을 채택했고,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관리·감독 체계와 정부 대응의 미비점 등을 엄정하게 따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집단소송법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실질적인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북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북의 구조적 취약성도 지적했다. 전북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농특산물 온라인 유통 의존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생산자와 공급자들이 정보보안 투자 부담을 홀로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더불어 고령층 비율이 높은 전북 특성상 디지털 격차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상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전북은 쿠팡 사태와 같은 정보유출 재난에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전북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도민주권 전북도정을 위해선 운영 체제를 넘어 도정 철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그 변화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전북 소비자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 정비와 조례 개정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피해 발생 시 전북도 차원의 법률 지원·집단소송 창구 마련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보안 시스템 도입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공약한 '도민정책 사회적대화 추진단'을 통해 개인정보 분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은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고, 민주당 역시 관행적 처벌 수준을 넘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며 "소비자 주권 전북도정으로 도민의 안전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유가족 권익 최우선 보장을"

'전주시장 출마' 조지훈 민주 원내대표 특보

전주 자임 추모공원 둘러싼 사태 관련

민선 9기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가 전주 자임 추모공원을 둘러싼 혼란 사태와 관련해 "유가족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조 특보는 12월 9일 보도자료와 자신의 SNS를 통해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추모공원 봉안시설 관리 문제를 두고 "선례를 찾기 어려운 무능한 행정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특보는 "행정이 방관하고 주저하는 사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유가족의 몫이 되었다"며 책임 주체인 전주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년째 지속된 법인 간 분쟁으로 인해 봉안시설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기본적인 추모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오랜 기간 심적 고통을 감내해 온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유가족이 요구한 △가족 추모권 △알 권리 △재산권은 "법인의 분쟁 여부와 무관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라고 못 박았다.

또한 전주시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특보는 "유가족과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두고서도 '근거 확인',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행정이 과연 시민의 안전과 품격을 지키는 기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주천의 버드나무를 베어낼 때는 그렇게도 신속했던 행정이 유가족의 고통 앞에서는 왜 이토록 더디고 무감한가"라고 지적했다.

조 특보는 전주시가 즉각 수용해야 할 조치로 △추모시간의 원상회복 △임시관리자 지정 등 행정의 직접 관리 방안 확보 △관련 법인의 소송 및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의 투명한 공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이전 및 피해 보전 대책 마련 등 유가족 제안 사항을 전면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끝으로 "추모공원은 고인을 모신 영혼의 안식처이자 유가족의 마음이 깃든 공간"이라며, "더는 행정의 무책임과 법인의 분쟁으로 아픔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전주시는 유가족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중단된 민선 7기 사업 완수… 정읍경제 재도약"

유진섭 전 정읍시장 민선9기 시장 재도전

햇빛연금 지급 등 제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민선 9기 정읍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다가오는 민선 9기 정읍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하며 정읍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 전 시장은 지난 8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의 성찰을 바탕으로 중단된 민선 7기 사업을 완수하고 정읍 경제를 재도약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 전 시장은 회견 시작부터 지난 민선 7기 선거 과정 중 발생했던 캠프 관계자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며, 최종 책임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고민 끝에 민선 8기 시장 출마를 불출마하며 책임을 다했다"고 밝힌 유 전 시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따라야 한다. 무소속 출마 권유까지 사양하고 지난 3년이 넘는 시간을 성찰과 성숙의 몸부림으로 채웠으며, 인구 10만 정읍의 현실과 비전에 대한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아직도 책임을 느끼고 있느냐'는 질문에 유 전 시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지난 시간 동안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을 다듬는 데 집중했다고 답했다.

유 전 시장은 정계 복귀의 발판이 된 특별 사면 및 복권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지난 30년 민주당 지기로서 정읍시민과 민주당의 성공을 늘 소망했다"며, "민선 7기 핵심 사업들이 민선 8기에서 지연·중단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고, 이를 완성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적 문제와 관련해 유 전 시장은 "지금껏 탈당이나 제명이 된 적이 없고, 사법부 판단에 따라 기본권이 제한된 사례"라고 설명하며, "복당 절차를 밟아 11월 28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탈당이나 제명이 아니니 '회복당'이 맞겠지만 당헌·당규에 없는 사항이라 복당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이를 받아 주신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화력발전소 논란 "민선 6기 결정, 폐목재 사용은 반대", '민선 7기 당시 화력발전소 허가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에 대해 질의하자, 유 전 시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했다.

유 전 시장은 "화력발전소는 2016년 6월 민선 6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읍시에 요구하여 허가 승인이 난 것으로, 당시 정읍시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6월 전북도에서 관리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되었고, 2020년 최종 단계에서는 법령상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 건축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처럼 폐목재를 연료로 이용한다면 당연히 반대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 전 시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을 '튼튼한 자주, 자립경제'로 꼽으며, 민선 7기에 정읍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음을 상기시켰다. 민선 9기에는 오로지 시민들이 잘살기 위한 정읍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매년 정읍시민 1인당 100만원의 정읍햇빛연금 지급"을 위한 자립 구조 구축이다. 그는 "민선 7기의 경험을 살려 이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맞게 균형을 맞춰 정읍시가 1호 햇빛연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전 시장은 "가급인족(家給人足,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함)이 제가 추구하는 지방자치 행정의 가치"라며, 정읍시민과 민주당원 동지들의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15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해 "살맛 나는 정읍이 다시 왔으면 좋겠고, 햇빛연금이 꼭 실행되어 인구가 증가하는 정읍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유 전 시장의 출마 선언으로 정읍 민선 9기 시장 선거는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돌입하게 되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교육활동 보호, 최소한의 인권"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교사 자긍심 7대 대책 제안

내년 지방선거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상임대표)은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교육활동보호는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인권"이라며 '전북 교사 자긍심 진작을 위한 7대 종합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이 전 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실에서 교사 혼자 모든 부담을 감당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사의 자긍심 회복은 곧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일로, 교육활동보호를 핵심 인권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교원 등 4,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3%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행정업무 과중(74%)이었으며, 10명 중 6명은 "민원·분쟁 대응이 수업보다 더 두렵다"고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장 요구를 반영해 제시한 '7대 종합 대책'은 △행정업무 대폭 경감 △교권 침해 예방·대응 전담기구 재구조화 △교사 면책권 보장 △정책 사전·사후 행정부담 평가제 △교원 복지·처우 개선 △민주적 학교자치 강화 △교육공동체 상호존중·분쟁조정 시스템 확립 등이다.

특히 전북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교 행정통합지원 기능을 대폭 확대해 공문, 회계, 시설관리, 보결, 채용 등 비본질적 업무를 지속 이관하고, 학교가 '수업 중심 조직'으로 전환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지역의 삶 · 임실치즈의 역사' 책 속에

김병이 임실군체육회장, 13일 '임실N김병이' 출판기념회

임실군 체육회장으로 임실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병이 회장이 지역의 역사와 삶을 정리한 책 '임실N김병이' 출간을 기념해 오는 13일 오전 11시 임실군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책은 김 회장이 임실에서 태어나 생활하며 보고 듣고 겪어온 다양한 이야기와 주민들과 함께 쌓아온 공동체의 삶을 기록한 에세이 형식의 작품이다.

특히 임실의 대표 브랜드인 '임실치즈'가 정착하고 성장해 온 과정, 그 안에서 지역민들이 보여준 도전과 협력의 역사를 김 회장의 시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회장은 "임실의 땅에서 살아오며 기억해 온 소중한 순간들과, 임실치즈와 함께 걸어온 시간들을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지역을 위해 헌신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임실이 나아갈 미래와 지역 발전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요청했다.

또한 김 회장은 "바쁘시겠지만 잠시 들러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평소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병이 회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지역 정치·사회 현안에도 폭넓게 참여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임실군수 출마를 목표로 표밭을 갈고 있다.

그간 임실군 체육회장으로서 지역 체육 활성화와 주민 화합에 기여해 온 김병이 회장은 이번 출판을 계기로 임실의 가치와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임실N김병이' 출판기념회는 지역 인사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출간 소감 발표, 축하 메시지, 임실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임실=진홍영 기자

박용근 전북자치도 신임 정책협력관 임명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정책협력관(지방전문임기제 가급·3급 상당)에 박용근 전 경향신문 부국장을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정책협력관은 1963년 장수출생으로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에서 사회부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했다.

이후 사회부 차장, 전국사회부 부장, 부국장 등을 거치며 굵직한 사회 현안을 심층 취재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특종상'을 다수 수상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수여하는 '녹색 언론인상'을 받을 만큼 환경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았다. 그는 2023년 경향신문사에서 정년퇴직했다.

언론 현장을 떠난 뒤에도 공공정책 자문과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정치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아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북선대위 언론특보를 맡았고, 제22대 총선에서는 정동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이만호 기자

"AI 시대, 개별맞춤형 온리원 교육 필요"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전북형 진학 · 진로 혁신 정책 발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9일 "인공지능(AI)·빅데이터 시대에는 획일적 줄세우기 교육이 아닌 개별 맞춤형 '온리원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북형 진학·진로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

천 교수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마다 다른 잠재력과 강점을 살려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을 키우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전북학생진학·진로교육원 신설 △AI 기반 진학·진로 플랫폼 구축 △초·중·고 진로연계학기 내실화 △전북형 오디세이학교 설립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천 교수는 "대부분 시·도에 있는 진학·진로교육 컨트롤타워가 전북에는 없다"며 "전북학생진학·진로교육원을 설립해 학생 개별 수준과 성향 기반의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교과·진로체험을 통합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AI를 활용한 진학 플랫폼은 학생의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심리 검사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전공 적합성, 진로 포트폴리오, 대입 전형 등을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능동형 진학·진로지원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초6·중3·고3 전환기에 시행하는 '진로연계학기' 강화도 제시했다. 천 교수는 "고3 수능 이후 기간을 금융교육·대학생활 준비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채워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학교 졸업 후 1년간 성찰·탐색의 시간을 제공하는 '전북형 오디세이학교' 설립도 제시했다.

이밖에, 특성화고 개선도 약속했다.

천 교수는 "전북 특성화고 취업률은 39.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피지컬AI·푸드테크 등 지역 전략산업과 직업교육을 연계해 '교육·취업·정주'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정의당 도당 "KTX · SRT 통합 환영… 전라선 증편 반영을"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오현숙)이 정부의 KTX·SRT 고속철도 운영 통합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전라선 증편을 최우선 과제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9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2026년 말까지 고속철도 운영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좌석 공급난 해소와 차량 운용 효율성 제고,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북도당은 이번 통합 논의가 지역의 교통권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라선 전주·수서 구간을 오가는 SRT는 하루 왕복 2편에 불과해 사실상 '고속철도 이용권'이라는 말이 무색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예매 대란과 강남권 접근성 부족으로 일상적인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만호 기자